

국민 제안 정부사업 내년 예산에 반영

국민참여예산제 운영방안 확정

국민 제안→정부 검토 →국민

참여단 심사→예산안 반영

전국 단위 신규 사업에 적용

500억 넘는 예타 대상은 제외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도입한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방안이 확정됐다.

일반 국민이 사업을 제안하고, 정부가 이를 구체화하면 예산국민참여단이 심사한다. 심사와 선호도 조사를 거쳐 최종선택된 예산 사업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는 방식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김용진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올해부터 시범 도입됐다. 국민이 정부 예산사업의 제안과 심사 결정까지 참여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에 제안하고 싶은 예산사업이 있다면 3월부터 4월까지 아이디어를 내면 된다. 3월 중 만들어지는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나 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예산 사업제안은 모든 분야에 걸쳐 가능하지만 사업효과가 전국적이고 신규사업이어야 한다. 총사업비가 500억원 넘는 등 예비타당성조사가 필요한 사업도 제안대상은 아니다.

또한 단년도 사업이 아닌 다년도 사업만 가능하다. 단, 시범적으로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고 전국으로 확대 시행이 가능한 사업은 전국사업으로 본다. 각 부처에서 이미 추진 중인 사업도 제안 대상이 될 수



“위험한 건 없습니까?” 지난 26일 경남 밀양 한 요양병원에서 화재 참사가 일어난 가운데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전주 시 참전동 한 요양병원을 찾아 환자들에게 위험 요소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

없다. 다만 기존 사업이라도 운영방식이 크게 개선된다면 신규사업으로 본다.

제안된 사업은 숙성 과정을 거친다. 민간 전문가와 각 부처가 중앙정부 사업에 맞는지 적격성을 검토하고 예산사업으로 구체화한다. 특히 아이디어는 좋는데 미흡한 경우, 사업구체화 작업이 진행된다.

각 부처는 5월 중 기획재정부에 예산요구안을 제출하는데, 이 때 가다들은 국민

제안 사업도 포함해 제출한다.

6월과 7월에는 다시 바통이 국민에게 돌아온다. 무작위로 구성된 예산국민참여단이 발족된다. 참여단은 부처가 가다들은 국민 제안 사업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사업 선호도 조사도 진행된다. 일반 국민 설문조사와 국민예산참여단의 투표를 통해 어떤 제안 사업의 선호도가 높은지 따져보는 과정이다.

이 같은 심사과정을 통과한 국민 제안 사업들은 8월 중 마지막으로 재정정책자문회의의 논의를 거쳐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다. 재정정책자문회의는 기재부 장관과 각 부처 차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국회 심의만 통과하면 국민이 제안한 사업이 실제 내년도 정부 사업으로 확정되는 셈이다. /뉴시스



‘익산의 든든한 힘’... 이춘석 의원 의정보고회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지난 28일 익산 스포문화예술회관에서 ‘익산의 든든한 힘’을 주제로 의정보고회를 열었다.

이 의원은 작년 주요 성과로 도시재생사업 선정을 꼽았다. 문재인 정부의 주력 공약으로 총사업비 330억 규모의 예산이 익산 원도상에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첨단 농생명산업 육성 기반이 될 농생명 ICT검인인증센터 및 중소기업 엔지니어링 설계지원센터를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을 받았다.

이춘석 의원은 “정권교체와 지역발전 과정에서 늘 한결같이 성원해주신 익산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9년 만의 정권교체로 익산과 전북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호기를 만난 만큼 앞으로도 여당 사무총장의 역할을 다해서 지역 발전과 국민 삶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이용호, 학교급식 식재료 입찰 개선 정책간담회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은 최근 국회의원회관 제82간담회실에서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한 식재료 구매계약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정책간담회를 했다.

현재 시·도 교육청은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시 특정한 브랜드나 규격 등을 지정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있어 일선 학교의 영양교사들은 식재료의 성분만을 기재해 입찰을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제품 성분만 일치하면 식재료의 품질이 떨어지더라도 납품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 간담회 현장에서 “고추 100%로 만든 고춧가루를 주문하면 국산 유기능이 아닌 중국산 고춧가루가 배달된다. 업체는 성분이 똑같은데 무슨 상관이라고 반문한다”며 답답한 현실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농산물 축산물 공산품(두부, 주스 등) 등 학교급식 식재료 모두가 일반입찰로만 입찰되니 불량 식재료가 들어와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다.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2016년 11월 14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항 제1절 7-나, 7에 단서조항을 신설해 국민의 생명보호, 건강 안전, 보건위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입찰이 가능하도록 했다.

간담회의 토론자로 참석한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위 규정이 학생급식 식재료 구매 시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규정 상 학교급식 식재료는 지정 입찰이 가능한데도, 일선 학교는 일반입찰 방식을 고수하도록 지도받고 있다. 결국 학생들만 불량 식재료에 계속 노출되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간담회에 배석한 교육부 관계자는 “과거 영양교사들의 대규모 리베이트 사건으로 인해 브랜드 지정입찰에 대해 다소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며 “각 학교에 좋은 식재료가 납품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학교급식은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좋은 식재료 구입이 건강한 급식을 위한 첫 걸음일 것이다”며 “행정안전부가 학생들의 안전을 생각해 개정된 예규가 일선 학교에서 하루라도 빨리 제대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헌재 “공천 탈락 예비후보자에 기탁금 돌려줘야”

공직선거법 조항 내년 7월1일 효력 상실... “공천심사는 탈락 예외 사유”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려는 예비후보자가 정당 공천 심사에서 탈락한 후 본선거 후보로 등록하지 않았을 때 기탁금을 돌려주지 않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기탁금은 후보 난립 방지 등 목적으로 후보가 되려는 이들이 각 선거관리위원회에 일정금액을 맡기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는 예비후보자였던 A씨가 청구한 공직선거법 제7조 1항1호 다목 중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관련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이 조항은 2019년 6월30일까지 개정돼야 하며 그때까지는 계속 적용된다. 헌법불합치는 사실상 위헌이지만 그 즉시 효력을 상실시키면 법적 공백과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법 개정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는 사망이나 당내 경선 탈락의 경우에만 기탁금을 반환하도록 규정돼 있다. 소속 정당의 공천에서 탈락해 당내 경선을 하지

못해도 기탁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헌재는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당 공천 심사에서 탈락해 본선거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것은 후보자 등록을 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는 객관적이고 예외적 사유”라며 “이러한 예비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천 신청을 했지만 정당 후보로 추천받지 못한 예비후보자가 정당 소속감 등으로 본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을 수 있는데 처음부터 진정성 없이 예비후

보 등록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정치신인 등은 부담을 느껴 등록을 꺼리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공천 심사에서 탈락한 예비후보자가 소속 정당을 탈당하고 본 선거 후보로 등록한다면 오히려 무분별한 후보자 난립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예비후보자에게 기탁금을 돌려준다고 상실성·책임성을 담보하는 공익 등이 크게 훼손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진성·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별개 의견을 내고 “예비후보자 기탁금 납입조항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므로 반환조항도 위헌”이라며 “예비후보자 기탁금 제도로 경제력이 없는 예비후보는 후보로 나서는 것 자체가 원천 차단된다”고 꼬집었다. /뉴시스

당신의 사랑은 제대로 전달되고 있나요?

적십자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제대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합니다.

적십자회비 집중모금기간 2017.12.1 ~ 2018.1.31

아십니까? 적십자가 더 투명한 이유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재무투명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경영 투명성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합니다.

국정감사와 회계법인 감사를 통해 매년 사업과 회계를 투명하게 검증 받습니다.

청명한 조직문화를 위해 클린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대한적십자사
후원문의 1577-8179
(민간단체)

후원금 사용내역
01 취미계층 맞춤형 지원 51,370,679,216
02 국내 재난 구호활동 16,359,898,992
03 해외 구호활동 4,079,359,901
04 안전 지식보급 5,733,677,999
...
“ 참여해주신 적십자회비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홍보대사 류수영